

성과 없는 암매장·행불자 조사...진상 규명 '허송세월'

출범 2년 맞는 5·18진상조사위원회 그동안 뭐했나

전두환·노태우 조사도 못하고 조사관 채용조차 마무리 안돼 허술 운영
활동내용은 비공개...지난해 4월 끝나야 할 과제 선정 작업도 못 끝내
3차례 조사보고서만 내놔...활동 1년 남기고 '수박 겉핥기 조사' 우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5·18진상조사위)가 출범 2년이 되도록 진상 규명 활동에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아까운 시간만 흘러보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신군부 핵심 인사들에 대한 대면 조사를 비롯해 최초 발표 명령자, 헬기 사격, 암매장 의혹 사건 등에 대한 최우선적 진상 규명 방침을 밝히고도, 전두환·노태우씨가 사망할 때까지 조사조차 못하는가 하면, 나머지 핵심 사안에 대해서도 의미 있는 조사를 못했기 때문이다. 여태껏 조사를 맡을 인원조차 정원을 채우지 못한

채 2년 가까이 채용만 진행중인 실정이다. 14일 5·18진상조사위에 따르면 조사위가 지난 2019년 12월 27일 출범한 이래 오는 26일로 2년을 맞지만 3차례의 조사활동보고서를 낸 것 이외에 지역민들이 기대하는 조사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조사위는 애초 2년 활동 기간을 채우도록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지난 9월 국회 국방위원회 동의를 거쳐 활동 기간을 1년 연장했다. 조사위의 2년 활동 성과는 3차례 내놓은 '조사위

원회 조사활동보고서'에 담겨 있지만 ▲무명열사(묘4-90) 신원확인 ▲5·18진압공수부대원의 사죄 등에 그치면서 실망스럽다는 평가도 나온다. 조사위는 3년 간 분기·단계별 목표를 '3년 활동 일정'에 담은 기본 계획을 마련했지만 애초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는 커녕, 기약없이 미뤄지는 게 더 많았다. 조직위 계획대로라면 올 1~2분기에 3차·4차 조사, 과제별 보고서 작성이 이뤄지고 4분기에 직권 조사보고서를 완료하고 내년 1분기 종합보고서 초안 완료, 2분기 종합보고서 최종본 작성·대정부 권고안 마련 등이 이뤄져야 했다. 하지만 지난해 4월에 끝내야 할 조사 과제 선정 작업이 지난 11월에야 이뤄지는 등 활동 계획이 한없이 미뤄지는 형편이다. 우선적으로 최초 발표 명령자, 헬기 사격, 각종 인권 침해 사건과 암매장 의혹 사건 등의 진상 규명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신군부의 핵심인 전두환·노

태우씨에 대한 조사를 머뭇거리면서 조사당사자들이 사망, 이들에 대한 대면 조사는 없던 일이 됐다. 2년이 되도록 핵심 진상 규명에 매달려야 할 조사관 채용도 마무리하지 못한 실정이다. 조사위는 53명의 조사관중 현재 40명만 채용했을 뿐 나머지 13명에 대한 채용 절차를 진행중이다. 남은 시간을 감안하면 자칫 '수박 겉핥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만하다. 상위 조사관 공석이 생기면 하위직 조사관이 응시하고 다시 하위직 조사관을 메워야 하는 방식이 반복되는 '윗돌 채우기'식 채용 시스템은 자리 나누기라는 비판을 받는 실정이다. 여기에 정보기관을 방불케하는 감찰이 정보 공개도 무늬를 숨기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송선태 위원장을 비롯한 5·18진상조사위는 조사 내용은 커녕, 기본적 활동 상황조차 알리지 않고 있다. 전원위원회 위원들이 참여하는 회의록도 몇 개월 간 업데이트를 하지 않고 있으며 임의적으로 조

사 내용을 알리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송 위원장은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5·18진상규명 특별법상 구체적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34조 7항)은 '위원회는 조사가 종료되지 아니한 사건에 관하여 조사내용을 공표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가 근거로 하는 법(32조 7항)에 같은 규정을 담은 조항이 있는데도, 중요 조사 내용을 공개했다는 점에서 소극적인 법 적용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진실·화해위 측 관계자는 "자칫 조사 내용에 포함된 개인정보가 공개되거나 영상이 미치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나 세부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내부위원들의 합의를 거쳐 공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여수산단서 화재 사망 노동자 3명 하청업체가 고용한 일용직이었다

"도급업체 직원 2명인 영세회사...위험의 외주화" 비난

지난 13일 여수 A유기화학제품 제조업체에서 발생한 화재(광주일보 12월 14일 6면) 사건과 관련, 하청업체가 고용한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위험한 업무를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작업을 맡은 B플랜트 회사는 고차 직원이 2명에 불과한 영세한 회사인데다, 일용직 노동자들을 상대로 한 작업 전 안전교육, 안전조치 여부를 제대로 갖추는 기업들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 사고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조심스런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노동청과 경찰은 해당 작업이 전문 자격을 갖춘 업체가 진행해야 하는 지, 도급업체가 기본 자격을 갖춘 업체인 지를 확인중이다. 14일 전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남청 과학수사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공동으로 이날 전남 여수시 주상동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사고 현장인 A산업에서 합동 감식을 벌였다. 경찰은 최초로 폭발이 시작된 지점과 주변 현장 등을 조사해 폭발 원인을 가려낼 방침으로, 공장에는 73기의 탱크 형태 저장고가 있었으며 폭발 지점 주변에는 10기가 모여 있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도 이날 사고 현장을 찾은 뒤 '화재·폭발 사고 방지를 위한 긴급 영상회의'를 열고 직원들에게 철저한 원인 조사와 신속한 사고 수습, 책임자 엄중 처벌을 당부했다. 앞서, 지난 13일 오후 1시 30분께 유기화학제품 제조업체 A산업 내 이소파라핀류를 보관하는 90㎥ 탱크에서 폭발을 동반한 화재가 발생해 노동자

3명이 숨졌다. 경찰은 숨진 노동자들은 탱크 상부에서 유기용제 배관을 연결하는 이른바 '불팅' 작업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숨진 노동자들이 모두 작업을 도급받은 B플랜트가 고용한 일용직 노동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직원이 두명에 불과한 B플랜트가 A산업에게 작업을 도급받아 일용직 노동자들을 고용, 일을 맡겼다가 사고로 이어졌다는 게 경찰 분석이다. 일용직 노동자들을 고용하면서 제대로 된 안전교육,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질 리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민주노총 여수시지부도 이날 성명을 내고 "최근 중대사망사고는 위험의 외주화를 통한 비정규직 노동자와 일용직 건설노동자들에게 집중되고 있다"며 "안전불감증과 개인의 부주의로 치부하기엔 구조적인 문제가 너무도 크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A산업이 하자가 발생할 때마다 단발성으로 공사를 계약하는 '공사성 도급계약'을 B플랜트와 체결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용을 아끼기 위한 공사를 진행하다 안전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A산업과 B플랜트 간의 도급계약서, 화재 발생 당일 작성된 작업지시서 등 관련된 모든 자료를 토대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 및 불법 여부를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14일 오전 여수시 주상동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유기화학제품 제조업체 A산업에서 소방대원이 폭발 사고 현장에 물을 뿌리고 있다. A산업에서는 지난 13일 오후 유류 보관 탱크에서 폭발을 동반한 화재가 발생해 노동자 3명이 숨졌다. <전남도 제공>

완도 해상서 선박 충돌 2명 실종

14일 새벽 3시 50분께 완도군 정산면 여서도와 여수시 삼산면 거문도 사이 해상에서 129 t 급 어선 A호(부산선적·승선원 27명)와 7589 t 급 화물선(중국 컨테이너선)이 충돌했다. 이 사고로 A호가 바다에 가라 앉으면서 승선원 27명이 바다에 빠졌다. 이 중 25명은 구조됐고 나머지 2명에 대해 수색 작업이 진행 중이다. A호 승선원 27명 중 한국인은 15명(13명 구조, 2명 실종), 외국인 12명(12명 구조)으로 확인됐다. 완도해경은 신고 접수 후 해양경찰 25척과 해군 4척, 민간선박어선 5척과 항공기 3대 등을 동원해 승선원 27명 중 25명을 구조했으며 실종자 2명에 대해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해경은 조명탄등을 사용해 야간 구조작업을 이어가고, 구조작업을 마치는 대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출제 오류 생명과학II 소송 오늘 선고

출제오류 논란이 불거진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II 문항 정답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당초보다 이를 앞당겨진 15일 나온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17일로 예정했던 수능 생명과학II 정답 결정 처분 취소 소송의 선고 기일을 15일 오후 2시로 변경했다. 선고 기일 변경은 각 대학 입학전형 일정이 임박한 점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0일 열린 1회 변론기일에 "선고 기일을 당길 수 있는지 보겠다"고 기일 변경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사건의 피고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변론기일에 "이달 16일 수시전형 최초 합격자 발표가 예정돼 있어 14일까지 판결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이후 교육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 협의를 거쳐 수시전형 합격자 발표일을 18일로 연기했다. /연합뉴스

<h3>상가매매(상무지구)</h3>	<h3>장성 토지(매매 분양)</h3>	<h3>경매교육 [특수전문반 기초반,중급반]</h3>
<p>중심상업지역 6층, 7층 (총분양 140평) 시세 -> 9억 급매가 -> 5억8천 (보 3천, 월 300만, 용 3억5천) (사무실 리모델링합,빠,유흥,모든업종가능 즉시입주 시비없음) 010-6670-9800</p>	<p>광주에서 20분(6M도로접) 장성댐 (호) 2분, 장성 IC. 5분 총 1760평 (150평, 200평, 500평, 분할가능) [전원주택,물류창고,주말농장,별장,투자적합] 010-6670-9800</p>	<p>특수경매전문(유치권, 법지, 지분) ① 기초반, 실전 (기초이론,실전) ② 중급반, 실전(중급이론,실전) ③ 고급 특수반 (유치권,법지,지분,엔피엘전문) ④ 전문반 모집(직업가능,수익가능) ·전문반무료제공- 책상, 컴퓨터 제공,매주1회물건스터디</p> <p>광주 북구 용봉동(다가구원룸)▶감정가 8억3천 -> 3억7천 (12/21) 남구 월산동(주택)▶감정가 3억5천 -> 2억 (12/21) 서구 쌍촌동(아파트)▶감정가 2억5천 -> 1억1천 (12/21) 북구 두암동(상가건물)▶감정가 4억2천 -> 2억9천 (12/29) 광산구 삼거동(임야)▶감정가 3억9천 -> 2억7천 (12/29) 서구 농성동(근린주택)▶감정가 8억1천 -> 4억5천 (1/12) 동구 계림동(근린주택)▶감정가 6억 -> 4억2천 (1/12)</p> <p>전남 목포시 상동(잡종지)▶ 감정가19억 -> 8억5천 (12/13) 나주시 빛가람동(근린상가)▶ 감정가 2억1천 -> 7천6백 (12/16) 무안군 일로읍(농지)▶ 감정가 3억8천 -> 1억3천 (12/20) 장성군 황룡면(주택)▶ 감정가 4억1천 -> 2억9천 (1/5)</p> <p>시외 전북 군산시(근린상가)▶감정가 2억7천 -> 6천5백(12/27) 경남 창원시(근린상가)▶감정가 40억 -> 13억 (1/13)</p> <p>062-382-5500</p>